

2018

제22호

발간년월 2019년 2월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감 수 최재선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인 양창호

홈페이지 www.kmi.re.kr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최지연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jychoi@kmi.re.kr/051-797-4713)

황재희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jhwang@kmi.re.kr/051-797-4728)

전현주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원
(hyunjj@kmi.re.kr/051-797-4720)

지역의 지속적 발전 여부는 노동력과 토지 등 전통적 생산요소에 의존한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달려있다.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전환 노력은 국가 주도의 지역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켰고,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제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졌던 정책 이행결과의 반성과 지역발전의 한계를 지역 스스로 넘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연안·해양은 국가의 고도성장을 이끈 핵심공간이다. 연안·해양 지역에 전국 인구의 32.9%(17년), 전체 제조업종사자수의 45.7%(15년)가 분포해 있고, 연안 지역의 도시화율은 90.7%(17년)에 이른다. 연안·해양지역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국가경제발전엔 이바지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해양수산업은 위축되었고, 연안·해양공간의 질은 저하되었으며, 지역 해양수산 자원의 관리역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나라는 항만물류, 수산, 해양과학기술, 해양안전·안보, 해양관광·레저, 해양환경·생태 등의 분야에서 세계 12위권의 해양국으로 성장했으나, 국가 해양수산업의 정책성과가 지역의 해양수산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최근 들어 해양수산 경제의 중요성과 지역혁신성장이 국가정책의 주요 화두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해양수산업에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저성장의 고착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집약적 해양수산 산업을 지식·기술집약적 해양수산 산업으로 전환해 지역 일자리 창출,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꾀하고 있다. 연안·해양의 11개 시·도는 지역 고유의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조례 제정, 종합발전체계 수립과 해양수산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있다.

부산시는 해양혁신성장의 거점으로 STEM 빌리지, 해운항만 지식서비스산업 기반 확충, 스마트 수산업 혁신,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등을 통해 동북아 해양수도로 나가기 위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대형 곡물창고를 활용한 인천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과 항만·공항·

철도를 연계한 항만물류체계 정비, 항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해양조선 플랜트 기술과 산업역량을 융복합한 해양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를 건립해 해양레저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양레저 엔진, 보트제조·판매, 마리나 등과 관련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플랫폼을 갖췄다. 충남도는 어항·어촌을 지역경제 핵심공간으로 조성하고, 전통 해양수산업을 해양치유관광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등 지식기술집약적 산업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과 재정계획을 마련하였다. 전북도는 새만금산업으로 축소된 해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최고의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물고기 클러스터 조성 및 새만금 수상 태양광 조성 및 해상풍력 실증단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국내 최대 수산생산력을 기반으로 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ICT 기반 첨단양식과 어장 과학관리 기반의 수산재해 대응사업 등을 추진하고, 해양관광·힐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요트마린 실크로드 사업’, ‘순천만 등 갯벌 문화유산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패류양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생산·가공·위생·유통·수출 통합형 패류 양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 해양항노화산업과 친환경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청정 수산물 유통·가공산업의 고도화, 제주 수산·가공산업의 창업과 투자지원 등을 위한 수산혁신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살아있는 인류문화유산인 해녀문화의 보전·전승을 위해 세계 유일의 해녀메카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경북도는 지역에 집적해 있는 해양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양과학기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포항항 구항에 항만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조성을 통해 ‘철강도시에서 신해양산업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도는 ‘평화의 바다’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명태·다시마 자원 회복, 오징어 등 회유성 어족자원 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핑 해양레저특화지구 지정을 통해 서핑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마린워킹 등 다양한 해양레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은 주도적으로 스마트항만·물류산업, 수산생명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첨단양식업, 해양관광·레저산업, 해양첨단제조업, 해양법률·금융서비스업, 해양에너지산업, 해양생태산업, 해양문화산업, 해양수산 클러스터 조성 등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의 추진은 민간수요를 기반으로 한 내생적 지역발전요인을 발굴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스스로 끌어올리고 안정적인 지역발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은 스스로 혁신성장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는 지역을 제도적·재정적으로 안정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지역의 협력형 해양수산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해양수산부와 시도 간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 해소와 지역의 혁신사업 기획역량을 향상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역의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사업에 관한 지속적 투자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앙부처간의 협업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광역단위의 해양경제권을 설정해 해양수산부와 시도, 시·군·구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발굴해 상생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는 해양수산을 비롯한 연안·해양지역에 적용되는 중앙부처의 사업과 시도 해양수산 정책을 제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지역 혁신성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는 지역에서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초하여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혁신역량과 경험을 길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안·해양지역의 특성과 발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의 혁신 패키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연안·해양, 국가 고도성장의 핵심공간으로 활용

■ 연안·해양, 국가 경제발전과 국가 해양력 증진에 크게 기여

- 연안지역은 전국 인구경제 규모의 1/3를 차지하고, 도시화율은 90.7%, 제조업특화지수는 1.41로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공간으로 활용함
- 연안지역 인구¹⁾는 17,021.8천 명('17년), 전국의 32.9%이고, 지역내총생산은 587조 원('15년), 전국의 37.5%를 차지함
- 연안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7년 기준 각각 64.4%, 62.9%로, 전국(63.4%, 61.4%)보다 높았고, 등록외국인은 연안지역에 전체 37.1%가 분포해 있음

표 1. 전국연안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비교

구분	인구 (천명, 17년)	도시지역 인구 비율 (%, 17년)	지역내총생산 (조 원, 15년)	제조업 종사자수 (15년, 천명)	산업다양성 지수 (15년)	등록외국인수 (천명, 17년)
전국	51,778.5	91.8	1,565.2	4,043	10.1	1,717.7
연안	17,021.8	90.7	587	1,847.2	7.9	434.4
연안/전국(%)	32.9		37.5	45.7		37.1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8. 8. 21. 검색)을 활용하여 KMI 작성

- 산업다양도 지수²⁾는 전국은 10.1인데 비해 연안지역은 7.9로 전국 수준과 비교하여 산업다양성이 낮았고, 연안지역에 제조업이 특화(제조업 LQ 1.41)되어 있음
- '15년 기준, 전산업체종사자수의 32.5%, 전체 제조업종사자수의 45.7%로, 연안지역에 분포할 정도로 제조업이 특화되고 있고, 일자리와 경제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공간임
- 1996년 해양수산통합행정체계가 마련된 이후³⁾, 우리나라는 해양연안관리, 수산·어촌, 해운·해사, 항만, 해양과학기술, 해양관광·레저 등에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 세계 12위권의 해양국가로 성장하였음
-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연안·해양의 세계경쟁력은 성장하는 추세이나, 해양수산 정책·사업이 사업·기능 위주로 이행됨에 따라 연안·해양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음

1) 연안해양 인구통계는 연안에 접한 55개 시군(부산시, 인천시, 울산시와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강원, 제주에 속한 시군)의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함

2) 산업다양성지수는 특정 지역 내에서 다양한 산업이 분포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산업다양도 지수가 높을수록 산업 간 교류와 연계 등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증진할 수 있음.

3) 1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해양행정을 통합한 해양수산부가 1996년 8월에 출범하였음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 수산자원관리, 해양안전, 해안심판, 공유수면 매립관리, 해양환경보전,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해양자원 개발 등 해양수산과 관련된 행정을 통합관리 수행(해양수산부, 해양수산 통합행정 20년사, 2016, p.39)

- 해양수산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 산업의 6.4%를 차지하고, 이중 조선업은 37.1%, 수산업 13.5%, 해운항만물류업 12.5% 순으로 차지함
- 연안·해양지역에 집적된 조선산업은 국내 수출고용의 7%, 제조업 생산의 4%를 차지하고, 국내항만의 화물처리실적은 15억 7,434만 톤('17년)으로 2009년 이후에 증가추세임
- 어업생산금액은 7조 4,216억 원('17년), 수산물가공생산액은 5조 9,167억 원('17년)을 차지하나,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은 증가하는 데 반해,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은 감소 추세임
- '17년 기준 해양레저관광 이용객은 580만 명으로, 해양레저관광수요는 많이 증가하고 있음

■ 전통적 해양수산업의 위축과 연안·해양공간의 질(質) 저하

- 연안지역의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는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었으나, 수산업, 선박제조수리업, 해운업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위축과 발전시설산업단지, 항만의 입지 등으로 연안·해양환경의 질이 저하됨
- 연안 고령화지수는 '17년 기준 108.2로 전국(104.8)보다 높았고, 독거노인가구 비중도 12.7%로 전국(7.0)보다 높게 나타났고, 재정자립도('18년)는 전국 53.4%에 비해 연안지역은 27.2%에 불과함
- 어가인구는 '17년 기준 121.7천 명으로 최근 5년간('12~'17년) 4.48%p씩 감소하였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난류성 어종(멸치, 갈치 등)은 증가하였으나,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은 감소 추세임
- 선박 및 보트건조업과 해상운송업의 전사업체종사자수는 '16년 기준 각각 132,258명, 18,064명이 고, 최근 5년간('11~'16년) 연평균 각각 1.72%p, 2.63%p씩 감소하였음
- 육지부해안선 중 자연해안선 비율은 48.6%이고, 연안습지는 2003년에 비해 63km² 감소하였고,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와 항만도시의 미세먼지는 심각한 수준임

표 2. 연안·해양의 사회경제적 변화

구분	고령화지수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천톤)	어가인구 (천명)	전사업체종사자수 (명)	
				선박 및 보트건조업	해상운송업
12년	79.7	1,091.0	153.1	(‘11년) 144,273	(‘11년) 20,644
17년	108.2	926.9	121.7	(‘16년) 132,258	(‘16년) 18,064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8. 8. 21. 검색)을 활용하여 KMI 작성

연안 지역 간 불균형 발전과 지역별 해양수산 발전역량의 차이

■ 연안 지역 간 사회경제적 발전과 삶의 질 수준에서 큰 격차

- 전체 연안인구 중 38.6%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37.2%가 인천·경기·충남지역에 집중해 있었고, 부산 인구밀도는 4,507.1인/km²로 가장 많았고, 강원 인구밀도는 135.3인/km²로 가장 낮았음
- 최근 5년간('12~'17년)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인 경기, 충남, 제주지역은 유입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높았고, 인구감소지역인 부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경북지역은 유출인구와 노령인구 비율이 높았음
- 연안 지역내총생산 중 42.6%가 인천·경기·충남에, 35.3%가 부산·울산·경남에 집중되어 있었고, 제조업이 특화된 지역인 인천, 울산, 경기, 충남 등에서는 산업다양도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연안지역의 등록외국인수는 경기도에 37.3%를 차지함
- 재정자립도는 부산, 인천, 울산, 경기 등 대도시권 지역과 강원, 전북, 전남 등 비도시권 지역과의 격차가 컸음

표 3. 연안 지역별 인구경제산업재정 수준 격차

구분	인구 비중 (17년, %)	지역내총생산 (15년, 조 원)	제조업특화지수 (15년)	산업다양도 지수 (15년)	등록 외국인수 비중(%)	재정자립도 (18년, %)
부산연안	20.4	78.2	0.8	10.3	9.9	58.7
인천연안	17.3	75.7	1.3	8.5	14.4	67.0
울산연안	6.8	69.7	1.8	6.0	4.7	66.0
경기연안	15.6	111.4	2.4	4.1	37.3	53.5
강원연안	3.0	12.9	0.4	10.4	1.3	18.9
충남연안	5.7	63	1.9	5.9	7.7	27.6
전북연안	2.8	15.1	1.3	8.4	2.0	17.4
전남연안	9.2	56.1	0.8	10.5	5.7	18.2
경북연안	5.1	30	1.6	6.8	4.2	22.3
경남연안	10	59.6	1.2	8.8	7.9	24.8
제주연안	3.9	15.4	0.2	10.0	5.0	42.5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8. 8. 21. 검색)을 활용하여 KMI 작성

- 육지부 자연해안선 비율은 고밀도의 개발이 이루어진 인천(28.9%), 경기(29.4%), 울산(31.2%)에서 낮게 나타났고, 강원(69.1%), 제주(60.3%), 경북(58.6%)은 자연해안선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사회적으로 자연환경의 질과 힐링, 행복 등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짐에 따라, 연안·해양의 자연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속가능 발전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됨
- 연안지역 간 삶의 질 격차는 크게 나타났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독거노인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만율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음
- 독거노인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많은 연구에서 고령화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분석되고 있음. 연안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보전 등에 관한 포용적 균형발전 정책수립이 시급함
- 하수도보급율의 경우, 경북(63.1%), 충남(65.5%), 전남(66.3%), 전북(71.3%) 순으로 낮게 나타나 지역 간 환경 인프라 격차가 크게 나타났음. 이 지역들은 어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육상하수가 직접 바다로 유입될 경우 해양환경 오염에 원인으로 작용함

표 4. 연안 지역별 사회·환경·건강의 수준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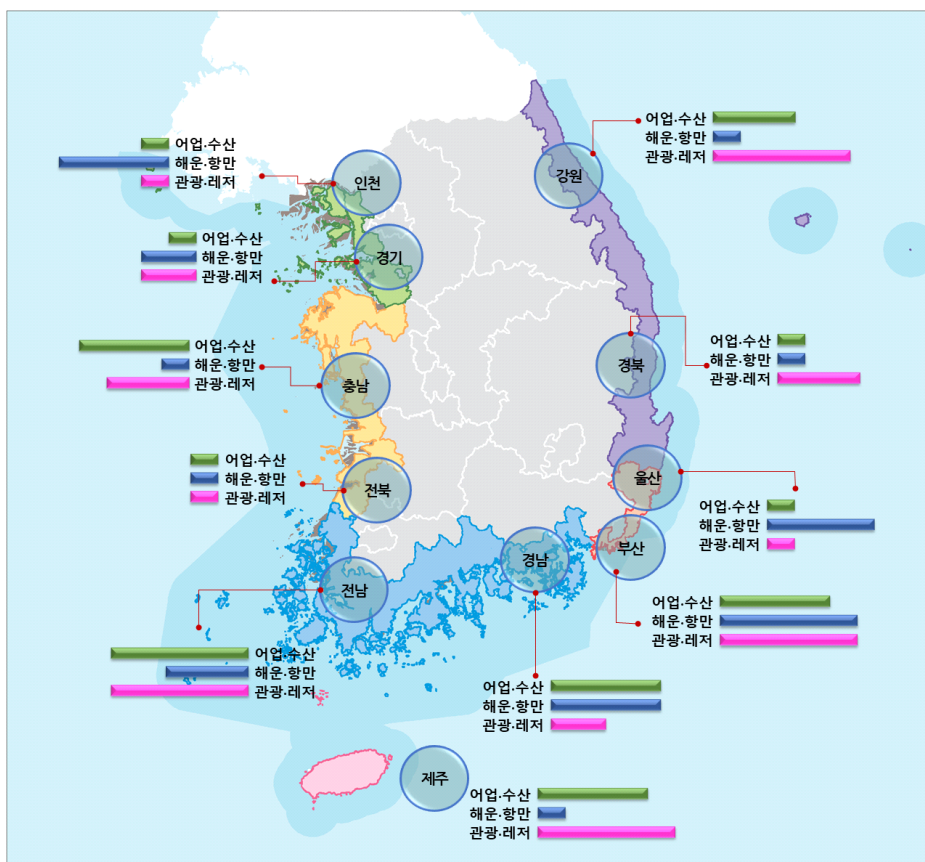
구분	육지부 자연해안선 비율 (17년, %)	하수도보급율 (16년, %)	독거 노인가구 비중(17년, %)	비만율 (17년, %)	인구 10만명당 자살율 (17년, 명)
부산연안	43.5	99.1	8.1	25.8	26.3
인천연안	28.9	97.5	5.4	29.8	24.0
울산연안	31.2	99.0	4.9	26.7	24.4
경기연안	29.4	88.8	4.2	30.2	24.2
강원연안	69.1	87.9	11.5	31.1	31.2
충남연안	49.0	65.5	10.9	29.5	35.0
전북연안	40.4	71.3	16.5	29.7	36.0
전남연안	51.0	66.3	16.9	28.6	27.2
경북연안	58.6	63.1	13.5	29.0	26.5
경남연안	45.5	80.4	13.0	28.2	23.7
제주연안	60.3	92.4	6.4	29.5	26.7

자료: 국립해양조사원, 해안선공표자료(2017),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8. 8. 21. 검색)을 활용하여 KMI 작성

■ 연안 지역별로 어업·수산, 해운·항만, 관광·레저 발전기반 역량 등에서 차이

- 시도별로 어업·수산, 해운·항만, 관광·레저, 지역 성장기반의 14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별 특화기반 역량을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어업·수산부문에서는 전남, 경남, 제주, 강원, 충남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는데, 어업생산은 전남, 경남, 제주 등이, 수산가공에서는 부산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
- 해운·항만부문에서는 항만과 국가산단, 조선단지 등이 위치한 부산, 울산, 인천 등이 상대적 우위를 점했고, 해상운송에서는 부산이, 선박보트건조업은 울산, 경남, 전남이 상대적 우위를 점함
- 관광·레저부문에서는 바다·섬·해변 등 자연자원이 풍부한 강원, 제주, 부산, 전남, 경북이 상대적 우위를 보였고, 해수욕장이용객은 부산, 강원, 충남 등의 해변을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부산이 어업·수산, 해운·항만, 관광·레저에서 발전기반 역량이 집중됨에 따라 부산 외 지역 간의 발전기반 역량에서 큰 격차를 보였음

그림 1. 시·도별 해양수산 부문의 발전기반 역량 비교



자료: KMI 작성

사도, 해양수산 자원의 종합적 활용을 위한 체제 정비 추진

■ 연안 11개 사도는 자체적으로 해양수산 종합 발전계획 수립과 전담조직 확대·정비 추진

- 사도에서는 지역의 해양수산 자원과 공간의 종합적 활용, 해양수산 전통·신산업 육성, 해양수산 관련 자치 권한 강화 등을 위한 자체적으로 해양수산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역에 맞는 해양수산 비전 제시함
- 부산과 제주는 해양산업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법제도 기반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
- 강원과 경북은 환동해 지역발전과 해양수산 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동해본부를 설치하였고, 울산, 충남, 전남 등에서는 지역 해양수산행정력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음
- 사도의 해양수산 발전계획과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국가 차원의 지역 해양수산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5. 연안 사도의 해양수산 관련 종합계획 추진과 전담조직 현황

구분	해양수산 관련 종합계획 (수립년도)	비전 및 기본방향	전담조직
부산	제2차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16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해양농수산국
인천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17년)	시민에게 열린바다, 미래세대를 위한 인천	해양항공국
울산	해양수산발전 종합계획 (추진 중, 2019년 상반기 수립 완료 예정)	글로벌 신해양도시, 해양신산업 도시, 지속가능한 연안도시	일자리경제국
경기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방안 (12년)	4만불 시대를 선도하는 新경기해양	농정해양국
강원*	2040 강원비전 (17년)	자연과 사람의 미래, Login 강원	환동해본부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15년)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 건도(建道) 충남	해양수산국
전북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17년)	바다의 힘, 전북	농축산식품국
전남	제3차 해양수산발전계획 (15년)	살고 싶고 소득 높은 어촌 건설	해양수산국
경북	신동해안 해양수산 마스터플랜 (14년)	바다의 시대 개막으로 해양경북 실현	환동해지역본부
경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 중)	수산양식업, 항만물류, 어촌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계획 수립 추진	해양수산국
제주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14년)	제주바다, 세계 해양도시를 품다!	해양수산국

주: * 강원은 '2040 강원 비전'에 해양수산 부문을 포함하여 작성

자료: 시·도의 관련 계획을 KMI 정리

■ 국가 해양수산 관련 정책사업은 여전히 기능적·부문적 이행방식 적용

-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해운·항만산업, 혁신형 해양수산업, 연안·어촌, 해양환경·생태 등 다양한 해양수산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 기반의 정책이행체계는 미흡함
- 지난 20년간 국가 해양수산 정책 이행으로, 해양경쟁력을 올리는데 성과가 있었으나, 그 성과가 지역발전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항만·수산·어촌·해변·갯벌·도서·해양관광 등 해양수산 부문의 국가정책과 지역의 해양수산발전 체계와 연계구조가 미흡함에 따라, 국가와 지역의 상생발전 토대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최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에서는 해양수산 부문의 발전전략·과제가 확대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을 통해 국토와 해양과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수산·어촌의 혁신성장을 통한 어촌조성을 목표로 어촌 소득·복지 증대 및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조성, 고부가가치 스마트 양식 활성화를 통한 수산업 혁신성장 도모,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산업 혁신을 통해 지역 수산산업 육성을 제안함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⁴⁾에서는 “계획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를 중심으로 하되,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전역”을 고려한다고 밝히면서 해양·섬·산지 등 국토 경계지역과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명시함

표 6. 해양수산부의 지역 활성화 관련 주요정책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어촌뉴딜 300	30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혁신성장 추진
항만 지역 활성화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울산항 등 항만거점개발, 항만도시 지역 통합개발, 노후·유희항만의 재생사업 추진 등
수산혁신	동서·남해안 거점지역의 스마트양식단지 조성, 수산물 가공클러스터 조성,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마리나·크루즈·수중레저·해양치유 산업 육성, 어촌관광 활성화, 해양레저관광공간 조성
해양환경·생태 보전·복원	특별관리해역의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이행,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갯벌복원사업 추진, 해양보호구역 관리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KMI 정리

4)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국토계획연구단, 2018)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별 계획안에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

사도 주도로 해양수산 현안 해소와 지역혁신사업의 발굴·추진

■ 부산, 해양과학기술 STEM 빌리지, 스마트 수산혁신, 북항 통합 협력 개발 등 추진

- 부산시는 지역에 집적된 해양·항만·수산·관광·해양과학기술과 금융·문화·교육·글로벌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최대한 연계·활용한 다양한 해양수산 지역혁신사업⁵⁾을 마련·추진하고 있음
- 부산시는 동삼해양혁신지구⁶⁾에 해양과학기술 STEM 빌리지를 조성해 해양 신산업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 스마트 수산혁신체계를 구축해 해양생태·수산자원 관리, 스마트 양식, 수산식품의 글로벌화, 해운·항만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은 4개 혁신지구⁷⁾와 연계하여 해양·금융·산업·관광·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참여정책모델로 추진함
- 부산시는 해양·항만·해양레저·수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수산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과 규제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음

■ 인천, 인천내항 상상플랫폼, 항만·공항·철도 연계물류체계, 해양문명도시 조성사업 등 추진

- 인천시는 해양과 도시의 통합적 계획·관리를 통한 해양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관문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항만·공항·철도 연계 인프라 구축, 해양·항만의 자치권 확대 등을 추진함
- 인천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함께 유류·대형 곡물창고를 활용해 청년창업, 가상현실드론 등 미래성장산업 지원, 문화·예술·쇼핑기능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인천항~배후단지~철도수송체계와 연계한 항만·물류·체계 정비와 항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과 서해5도 등의 섬발전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하고자 함
- 인천의 해양역사·문화 정체성과 자산 등을 활용한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등 해양문명도시 조성사업과 해양철책선 제거, 해안면 시민 여가공간 조성사업 등 추진함

5)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하고, '지역특화산업'은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 성장에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 일자리와 창출·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함(『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1의2, 제11조)

6) STEM이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의 약자로, 해양 신산업의 연구개발 등 혁신성장 거점으로 활용

7) 해양수산 동삼혁신지구, 금융산업 문헌혁신지구, 공동주거지 대연혁신지구, 영화영상 센텀혁신지구

■ 울산,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북방물류산업 등 추진

- 울산시는 침체되는 조선·해양산업의 대체산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해양플랜트 지식·기술인력 등을 부유식 해상풍력시설 인프라로 활용하고, 북방경제 활성화에 대비한 북방경제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 울산시는 플랜트 기술과 산업역량을 융·복합한 해양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에 사용이 끝나는 동해 가스전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로 조성하고, 해중·해저 공간은 수산양식·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 울산시는 북방물류산업 지원과 활성화를 통한 북방해양 경제협력의 거점을 조성하여 울산항 연관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고래문화특구와 어촌뉴딜 300 사업을 연계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복지 어촌건설사업을 추진함

■ 경기, 해양레저산업의 전문인력 육성, 관상어 생산, 해운물류 청년 취업 등 추진

- 경기도는 수도권에 속해 있는 입지적 우위를 살려 해양레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창업체계를 마련하고, 친환경 패류양식·관상어 생산단지 조성, 해운물류 청년 취업체계 마련 등을 추진함
- 경기도는 해양레저관광인프라를 활용한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를 건립해 해양레저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양레저 엔진, 보트제조·판매, 마리나 등과 관련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 친환경 어업 패류양식 경쟁력 강화, 아쿠아팻랜드 관상어 생산단지 조성, 고품질 친환경 김양식어장과 수산식품 산업 지원체계 등을 추진함
- 평택항의 화물유치와 항만산업화를 위한 해운물류 전문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 강원, ‘평화의 바다’ 프로젝트 추진과 서핑레저특화산업 육성 등 추진

- 강원도는 ‘평화의 바다’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 공동의 수산자원 회복사업 등을 추진하고, 서핑 해양레저특화지구 지정, 서핑 서비스업 활성화와 다양한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함
-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평화의 바다’ 프로젝트는 공동어로 조업, 명태다시마 자원회복, 오징어 등 회유성 어족자원 보호, 동북아 크루즈 전진기지 등이 주요 내용임
- 전국 서핑업체의 58%가 강원 양양에 입지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를 추진하여 레저인의 체류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서핑특화산업 활성화를 추진함

■ 충남, 어촌어항의 지역경제 핵심 공간 조성 및 지식기술 집약적 해양수산물로 전환 등 추진

- 충남도는 해양수산 자원과 공간을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양바이오·치유산업 등 해양 신산업 육성, 어촌산업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해양이용개발수요가 서해안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기반 구축과 항만·어촌 도서지역의 계획적 특화개발을 추진하고, 미래 해양도시 육성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함
- 충남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치유관광산업, 해양바이오 산업 등을 육성하고, 그간 개발로 훼손된 연안·하구·갯벌의 해양보호·복원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이야기가 있는 바다, 삶이 있는 바다’로 만들기 위한 해양역사문화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을 마련하고, 어촌어항을 지역경제 핵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어촌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함

■ 전북, 민물고기 클러스터 조성 등 내수면 산업과 해양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 추진

- 전북도는 전국 최고의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하고, 새만금사업으로 축소된 해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북도는 내수면 산업과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수면 양식의 마케팅 지원, 유통·가공·체험·관광 등 복합기능이 조화된 민물고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연계한 해양 신산업을 확대하고, 새만금 최대 수상 태양광 조성 및 서남해 해양풍력 실증단지 조성 등을 해양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추진함
- 군산 근대문화역사~새만금~고군산군도~부안~고창을 잇는 서해안 신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함

■ 전남, ICT 스마트 양식과 과학기반의 어장관리체계 적용, 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 등 추진

- 전남도는 수산업과 식품산업, ICT 기술을 결합한 수산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과학기반의 어장관리를 통한 수산재해 대응체계 구축, 섬·갯벌 등 문화유산·생태복원사업, 소형 선박수리 산업의 재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
- 전남도는 국내 최대 수산생산력을 기반으로 수산물의 처·가·공·유통 등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수산식품 클러스터, 노후 양식장·간척지 등에 ICT 스마트 첨단양식과 어장과학관리 기반의 수산재해 대응사업 등을 마련·추진함
- 전남도의 해양관광·힐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요트마린 실크로드 사업’, ‘순천만 등 갯벌 문화유산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지역 조선산업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해 소형선박 해양테스트 기반 구축과 레저 선박 기자재 고급화 등을 위한 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 경북, 해양과학기술 벨트 구축, 신해양·항만도시 육성, 울릉도의 에너지 자립섬 등 추진

- 경북도는 해양과학기술 R&D의 거점화, 항만·도시체계를 연계한 신해양산업도시로의 전환,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협력체계 구축, 대게·오징어 등 자원회복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경북도는 지역에 집적해 있는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신산업을 결합한 해양과학기술 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포항항 구항에 항만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조성을 통해 ‘철강도시에서 신해양산업도시’로 도약을 추진함
- 대게오징어 등 동해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강원도와 협력을 추진하고, 동해안에 있는 원자력, LNG 등 에너지안전클러스터의 내실화를 추진하며 울릉도를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으로 개발하여 해양영토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함

■ 경남, 패류양식산업의 혁신성장, 해양항노화산업의 활성화, LNG 벙커링 클러스터 등 추진

- 경남도는 패류산업 체계적 육성사업과 스마트양식을 추진하고, 해양항노화산업의 집중적 발전체계 구축과 친환경 선박건조를 위한 LNG 벙커링 클러스터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경남도는 패류양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해역별-품종별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소규모 업체의 인프라를 구조화하여 생산·가공·위생·유통·수출 통합형 패류 양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함
- 경남도와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발전소 유희용자를 활용해 스마트 양식 실증센터와 다기능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경남도는 첨단 해양항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해양치유·웰니스 체계를 구축하고,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선박건조를 위한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을 준비하고 있음

■ 제주, 미래 전통 수산업의 육성, 해녀 문화유산사업, 해양관광 허브도시 조성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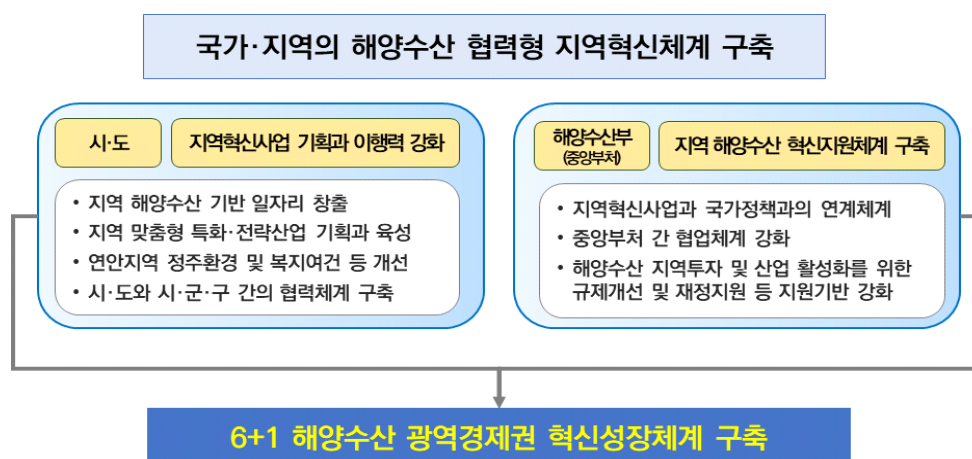
- 제주도는 전통 수산업의 미래화와 고도화, 해녀문화유산사업의 체계적 추진, 제주의 청정·공존 가치 유지를 위한 자연해안·해양환경 보전사업,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거점화 사업 등을 추진함
- 제주도는 전통 수산업의 1조 원 시대를 맞이해, 청정 수산물 유통·가공산업의 고도화, 제주 수산 가공산업의 창업과 투자지원 등을 위한 수산혁신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음
- 인류문화유산인 해녀문화의 보전·전승을 위해 세계 유일의 해녀메카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청정제주바다 지킴이’ 제도를 통해 깨끗한 해안면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를 해양관광의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제주 크루즈산업 육성과 남북 평화 크루즈라인 개설 등을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크루즈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함

지역 주도의 해양수산 혁신성장체계 구축 시급

■ 연안·해양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해양수산 지역혁신체계 구축 필요

-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지역은 스스로 혁신성장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는 제도적·재정적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지역의 협력형 해양수산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와 시도 간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은 해양수산 혁신사업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의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지역사업에 관한 지속적 투자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이행을 통해 지역의 경제·사회·환경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해양의 동질성과 차이성에 기초한 ‘6+1 해양수산 광역경제권’의 개념을 도입해 해양수산부와 시도간과 시도간, 시도와 시·군·구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생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양수산 등을 비롯한 연안·해양지역에 적용되는 모든 중앙부처와 사업과 시도 해양수산 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개정 등을 통해 해양연안권역별 해양수산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중앙부처는 지역의 해양수산 혁신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허용-사후규제’방식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허용하고, 지역은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초하여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혁신역량과 경험을 길러야 함
- 연안·해양지역의 특성과 발전역량, 일자리·주거안전·복지·친수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의 연계 패키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그림 2. 해양수산 지역혁신체계 구축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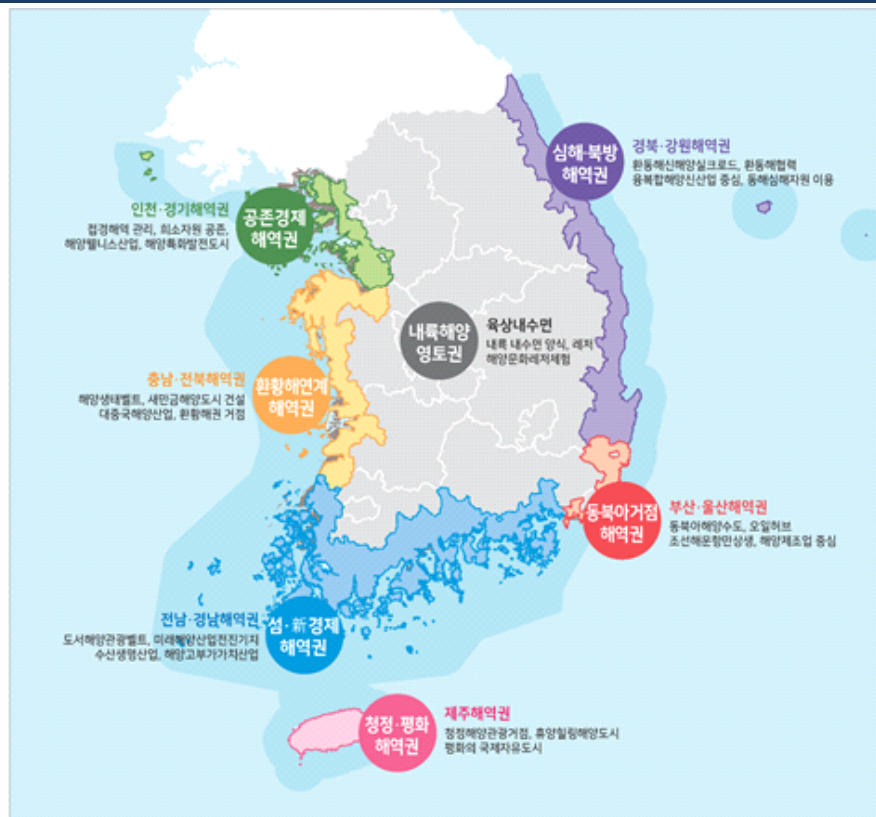


주: KMI 작성

■ 「6+1 해양수산 광역경제권」 설정을 통해 초협력형 지역 해양수산 혁신성장 추진

- 「6+1 해양수산 광역경제권」은 해양의 개방성·동질성에 초점을 맞춘 상호협력 관계에서 지역 중심의 해양수산 혁신성장체계 구축이 필요함
- 공존경제해역권(인천·경기): 연안·해양의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통한 해양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함
- 환황해연계해역권(충남·전북): 환황해 연계 해양신산업 거점지 육성과 해양생태벨트로 구축함
- 섬·新경제해역권(전남·경남): 전통적 수산업과 항만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해양경제의 전진기지로 육성함
- 동북아거점해역권(부산·울산): 해양수산물과 지역고유산업의 융·복합화, 첨단화와 해양지식기반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해양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함
- 심해·북방해역권(경북·강원): 남북교류와 북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동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해양에너지·해양자원 개발 등 관련 해양에너지과학벨트를 구축함
- 청정·평화해역권(제주): 제주 고유의 ‘섬’, ‘평화’와 ‘청정’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지역발전전략 마련하고, 건강한 해양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청정·힐링 도시로 발전함
- 내륙해양영토권(육상내수면): 내수면 수산·관광자원의 지속가능 관리·활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강마을의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함

그림 3. 6+1 해양수산 광역경제권 기본구상(안)



주: KMI 작성

■ 연안·해양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해양수산 지역혁신사업 발굴 필요

- 연안·해양지역의 개방성, 고유성,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함
-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정비, 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연안·해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중앙부처의 획일적 법령·계획 등을 개선하기보다는 연안·해양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간 연계구조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정책결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작은 사업이더라도 규제해소와 함께 근거법률 등을 개선하여 추진력을 확보해야 함

표 7.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제안(안)

사업명	주요 내용
연안·해양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지역 주도의 섬·해안 등의 고유생활양식(의식주), 전통어구·어업 등 해양생활유산, 항만·어항 등 해양근대산업유산 등의 보호·활용·지원 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해양국제교류도시 조성·육성	해양을 주제로 한 국제교류와 협력 등을 위한 축적된 지역역량을 활용한 국제 해양지식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의 글로벌화 UN해양법 및 해양수산 관련 국제법 연구와 소도서국을 비롯한 해양 개도국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해양국제교류 거점연구센터 설치
항만배후지역 자유무역지대 확대 설정	(단기)항만법(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자유무역지역법상 스타트업 활성화 및 부가가치 물류활동 저해 규제조항 개정 (장기) 자유무역지역을 근간으로 규제 프리의 동일 원칙이 적용되는 자유무역지대로 전환
지역맞춤형 해양관광 상품 개발	도서관광 수요증가에 따른 도서접근시설·도서교통체계 개선과 관광상품 등 개발 유선·도선사업의 활성화 추진과 도서관광 거버넌스 구축 등
어촌 활력화 및 재생사업	어촌비즈니스업 추진모델과 도시어촌·강어촌 등 종합적 어촌개발 체계 구축
해양과학기술 지식허브 클러스터 조성	해양산업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 등 연계와 해양수산 기업지원 등을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해양수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
해외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 수출산업화 추진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과 어촌지역 발전과 연계발전 방안 수출전략형 수산가공업 육성을 위해 권역별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and 지역수산 성장거점으로 활용
지역 수산전통시장의 활성화	지역 수산시장의 위생과 안전성 보장을 위한 수산물보관·처리시설의 현대화 추진 수산시장 실태조사와 지역 수산시장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수산시장의 명품화와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첨단양식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	ICT 기술과 양식기술을 융합한 첨단 양식산업의 활성화 간척지 활용 첨단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 실시
도서지역의 대중교통화 사업	연안항·여객선박 등 국가기간교통시설로 지정 추진과 연안해운의 대중교통화 추진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와 여객선 현대화 등 추진

사업명	주요 내용
S.E.A Coast 사업	낙후된 연안 원도심, 항만, 어촌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고(safety), 생태적으로 건강하며(ecosystem) 쾌적한(amenity) 연안지역을 조성 연안에 위치한 노후·유헴부지(폐조선소, 폐양식장, 노후항만·어항 등)와 미준공 매립지 등 재활용 부지로 지정 및 사업화
연안지역 Startup 육성사업	연안지역의 우수한 발전 잠재력에 기반한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기회 마련을 통해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 해양수산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과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규제정보서비스 등의 일원화 추진

자료: KMI 작성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미얀마 수산 성장 엔진, 국립수산물대학 설립 ODA 사업으로 밝혀야	2018.10.12.
제2호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부 지원사업 구상 연구	2018.10.12.
제3호	청년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물류인력 양성 서둘러야	2018.10.13.
제4호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2018.10.18.
제5호	자율운항선박으로 스마트 디지털 해상물류체계 실현	2018.10.18.
제6호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 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 인증제를 중심으로-	2018.10.25.
제7호	표준계약서 및 장기 계약 제도 도입으로 컨테이너 화물 해상 운송 계약 관 행 개선	2018.10.25.
제8호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2018.11.01.
제9호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2018.11.01.
제10호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2018.11.08.
제11호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2018.11.08.
제12호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 정보 생산·활용 방안	2018.11.15.
제13호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2018.11.15.
제14호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2018.11.22.
제15호	항만물류 부문의 남북 협력사업 추진 전략	2018.11.22.
제1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2018.11.29.
제17호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8.11.29.
제18호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2019.1.17.
제19호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한-베트남 수산식품 가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2019.1.17.
제20호	신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2019.1.31.
제21호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2019.02.08.

URL: <https://www.kmi.re.kr/>